

데 이 클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박원순변호사

수 신 : FAX/8225229994(박원순변호사)
발 신 : !KR/DACOMHS/CHOLLIAN//J1116
송신 시간 : 94/10/29 18:36
수신 시간 : 94/10/29 18:38
메시지 ID : 0000011457
제 목 : 하시모토통산상 망언규탄

송 신 자 : J1116 (윤미향)

한 국 정 신 대 문 제 대 책 협 의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 B-1
전화: 263-2802 팩스: 263-2803

정대협: 제 94-50호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하시모토 통산상 망언 규탄

일본정부는 하시모토 통산상을 즉시 해임하고 아시아 각국에 국회결의 사죄와 국제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이행하라!

일본정부의 각료들은 이제 차례로 돌아가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와 아시아 각국의 침략 사실을 부인하는 망언을 계속하기로 작정했는가!
난징학살이 조작이고 '일본군'위안부'가 공창이라고 주장한 나가노 시게토 전 법무상, 태평양전쟁이 아시아의 피식민국가들을 해방시켰다는 사쿠라이 신 전 환경청장관의 망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는 하시모토 통산상이 한국의 식민지배는 침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1. 다시는 이러한 망언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하시모토통산상을 즉시 해임하고 아시아 각국에 국회결의를 통한 사죄를 하라.
지난 삼년 동안 일본의 역대 총리가 아시아각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진사'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과거사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였다.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총리들이 언제까지나 사죄의 말을 해야하느냐하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일본사회는 언제까지 총리의 발언과 각료의 발언이 다른 이런 사태를 계속할 것인가하는 반문을 하게된다. 과거 총리들의 사죄 표현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정하는 발언을 한 각료는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의 과거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일본국회의 결의로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이행하라.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척도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고 국제법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본회 및 많은 민간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것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아시아 각국에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등을 비롯한 전후문제의 올바른 처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 연후에야 아시아 각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가능할 것이다.

1994년 10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